

바른 Law & Policy Brief

Vol.2 | 2025.08

Summary & Insight

이번 바른 Law & Policy Brief는 경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와 국정운영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부의 주요 정책마련, 대외 경제여건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신 정부의 입법·정책의 움직임이 그 속도를 빨리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입법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 상법 개정안 처리 방향)

- 이사의 주주총실 의무 법제화 이후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대상입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정 마련에 대응해 기업은 정관 정비, 이사회 구성 방식 및 주총 운영 등 **전방위적 대응 체계 마련**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처리 압박)

-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교섭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 노란봉투법이 제도화되면 사회적으로 노동권 확대의 긍정 효과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법률 리스크 증대, 국내외 투자 위축 등의 **위험요소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검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야새 지도부 구성)

-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뒷받침을 당 운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8월2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여야관계에 따라 정치적·정책적 구도가 형성될 것이 예상됩니다.

✓ Summary & Insight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및 시사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외 협상인 한미 관세협상이 완료됐습니다.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 15%,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및 조선업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반도체·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은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세워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는 미국내 투자 활성화와 설비투자 협력을 위해 해당업종별 활용 전략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재명 정부 각부 장·차관 인선 마무리)

-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각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교육부(부총리)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장관이 확정됐습니다. 향후 각부 장·차관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추진될 것이 예상됩니다.

(주목되는 법률안: 스테이블코인 법안)

- 7월 한 달간 새롭게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606개입니다. 이 중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여야 의원을 통해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확대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금융당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도화는 향후 관심있게 주목해야 할 대상입니다.

(AI 첨단산업 및 에너지 전략 세미나 개최)

- 여야 국회의원의 정책 세미나 중 주목되는 것은 AI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AI 선도국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제, 정부가 선도해야 할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한 모색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핵융합에너지 분야의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실증단계를 거쳐 상용화 단계를 대비하는 핵융합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산업적 고도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발전 과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됐습니다.

I. 정치 및 주요 정책 동향

1. 국회 주요 정책(법안) 동향

◆ 2차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입법 현황 및 주요 내용]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이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과 감사위원회 구성 시 분리 선출 이사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국회 회기 중 본회의의 통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야당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예상 변화 및 시사점]

- 법사위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의 내용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안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결합되면, 경영권 견제와 소액주주 영향력 제고 가능성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경영 효율성 저하·이사회 내부 갈등 증가·정보보안 리스크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소액주주 권리 확대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기업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법적 대응은 물론, 정관 정비·이사회 구성 방식·주총 운영·내부통제 및 IR 전략 등 전방위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쟁점별 대응 과제]

주요 쟁점	대응 과제
정관 정비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던 조항이 있는 경우 정관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 이후에는 법적 효력 유지 여부 확인 필요
이사회 구성 및 사차임기제 도입	다수 이사 동시 교체 시 경영 불안정 가능성 대비 → 사차임기제 등 운영 방안 마련
투명성 강화 및 주주 대응 체계 수립	소액주주 요청 시 집중투표 대응 프로세스 구축, 이사회 구성 후보 사전 분석·준비
정보보안 및 내부통제 강화	소액주주 이사의 영향력 확대에 대비해 내부정보 유출 방지 체계 마련
정책 모니터링 및 대응	향후 관련 법령(시행령·지침) 변화 모니터링, 주주총회 안건 준비 체계 강화 및 사전 외부 법률 자문 확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현황 및 주요 내용]

-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한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8월 1일 법사위도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7월 국회 회기 중 본회의 통과는 되지 못했으나, 여당 주도로 8월 국회 기간 중에 처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부터 실제 적용될 전망입니다.
-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개념	상세 내용
사용자 개념의 확대	원청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도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됨
노동쟁의 개념 확장	기존 '근로조건 결정' 범위를 벗어나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구조조정·투자·이전 등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강화	합법적 쟁의 행위 또는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노조·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 법원은 조합원별 책임 비율을 판단하고,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 시행 이전의 손해배상 사건에도 적용 가능

[향후예상 변화 및 시사점]

- 협력업체가 많은 제조업·조선·자동차·건설업은 다수 하청노조와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지게 되어 교섭부담 및 생산 중단 리스크 증가 등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은 하청 대기업 분쟁의 영향으로 간접적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및 투자가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적·운영상 리스크 증가로 인해 투자 매력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교섭 기회 확대에 초점이 있으며, 일부 구조조정·투자 의사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노동권을 대폭 확대합니다. 다만, 경영계·국제투자가·중소기업 등은 리스크 확대와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이는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쟁점입니다. 기업들은 특히 사업장 구조와 노사관계, 법률 리스크, 대응 시스템 마련에 초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쟁점별 대응 과제]

주요 쟁점	대응 과제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하청구조 분석, 교섭대상 파악 및 사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생산 중단 리스크	협력업체별 노무 리스크 평가, 비상대응 매뉴얼 구축 및 공급망 재편 검토
법률 절차 불확실성	법률 자문과 함께 판결·실무 기준 모니터링, 손해배상 책임 분담 기준 대비
기업 투자 리스크	신설 국정기관 및 노동정책 변화 모니터링, 외국계 기업 불확실성 해소 위한 가이드라인 확보
중소기업 보호 전략	하청 기업 경영상황 분석, 중소기업 단체 보호방안 강구 및 중기부와 협력
소통과 여론 관리	노동계·정부 정책과 연동한 정책 설명회 개최, 사회적 대화 노력 강화

◆ 정당 및 정치권 주요 동향

[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 선출]

- 8월2일 전당대회를 통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정청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신임 정청래 당대표는 취임 이후 첫 최고위원회를 통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 3대 개혁을 위한 당내 기구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인 확정]

-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8월22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는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가나다순)가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당대표 선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한미 관세 협상 주요 내용 및 분석

[한미 관세 협상 주요 내용]

-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25년 8월 1일 발효 예정이었던 한국산 대미 수출품에 대한 25% 관세 조치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는 15% 관세 수준으로 조정하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② 1,500억 규모의 조선업 펀드 ③ 1,0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구매 ④ 반도체 및 제약 분야의 특혜 대우 확보 등의 성과를 발표했으며, 쌀과 소고기 등 민감 농산품에 대한 양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기업의 준비 과제]

항목	주요 내용
관세율 변화내용	한국산 수출품이 미국 수출 시 15% 관세 적용을 감안한 가격·수익성 재분석 필요
투자 및 에너지 구매 대응	투자 유치 및 대미 조선·에너지 구매 계약에 따른 법무·회계·계약체계 정비
수출 전략 재정비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품목 수출 전략 조정, 시장 다변화 또는 유통구조 전환 고려
무역구제 리스크 관리	향후 미국의 세이프가드·반덤핑 조치 가능성 대비 회사별 대응 체계 구축 필요
ESG·디지털 의무 확대 가능성	투자 및 구매 계약 조건에 따라 환경·사회·거버넌스 기준 충족 시스템 마련 필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업종별 대응 전략]

➢ 자동차 및 부품

-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격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또는 현지 조립(CKD) 방식 검토
 - ② 대미 수출 모델 재편 (전기차 → 내연차 or 프리미엄차 집중)
 - ③ 공급망 유연화 및 멕시코·캐나다 경유 USMCA 활용 고려
 - ④ IRA 대응을 위한 배터리 원산지 규정 준수 철저

➤ 반도체 및 첨단 전자산업

- 미국 측 핵심 관심 산업으로 정책적 유인 및 규제 병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CHIPS Act 보조금 활용, 미국 내 생산거점 확보 (파운드리/패키징 등)
- ② 민감기술 지정 가능성 대비해 기술이전·수출통제 관리 강화
- ③ 공급 안정성 강화 → 공급망 다변화·재고 분산 전략 수립

➤ 조선 및 해양플랜트

- 한국 정부의 1,500억 원 규모 펀드 약속에 따른 미국발 수주 가능성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미국 LNG·원유 수송선, 해양플랜트 수주 확대 목표
- ② K-조선 기술력 강조 + 미국 인프라 투자 연계 마케팅
- ③ 펀드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PF) 설계 및 컨소시엄 구성 추진

➤ 에너지 및 자원 산업 부문

- 한국 측 1,000억 달러 규모 대미 에너지 수입 약속으로 국내 유통시장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장기 공급계약(LNG 등) 체결 시, 환율·유가 변동 대응 전략 필요
- ② 국내 정유·전력·화학 기업은 연계 인프라 확보 및 저장설비 투자
- ③ 탄소배출·친환경 에너지 인증 등 ESG 기준 충족 설계 필수

➤ 농수축산 및 식품 관련

- 민감 품목에 대한 양보는 없었으나, 미국의 비관세장벽 및 검사 강화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HACCP, 식품안전인증 등 미국 기준 사전 확보
- ② 고부가가치 상품(예: 기능성 식품, K-김치 등) 중심 수출 포지셔닝
- ③ 대미 유통망 공동 브랜드 및 한미 합작 마케팅 확대

[한미 관세 협상 중 투자펀드 관련 활용 방안]

펀드 유형	목적	활용 전략	대상 업종
조선·해운 산업 펀드 (1,500억 원)	미국 선박수주·투자 활성화	민관 공동 PF 구성, R&D 연계 금융 지원	조선, 기자재, 친환경 선박
AI·반도체 첨단산업 펀드	미국 내 설비투자 촉진	미국 공장설비 투자 시 자금 매칭 지원	반도체, AI, 전자부품
에너지 구매 연계 펀드	대미 장기 에너지 수입 계약 체결 지원	LNG 수입 + 정유·발전 투자 통합 금융 설계	에너지, 정유, 발전
공급망 재편 대응 펀드	미중 갈등 속 친미 공급망 전환 유도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 인센티브 제공	2차전지, 희토류, 화학 소재

[국가별 트럼프 행정부 관세 협상 결과 비교]

국가/지역	최종 관세율	협상 내용 요약	주요 조건 및 합의 요소
대한민국	15%	초기 위협 25% 관세에서 15%로 인하	대미 투자 약속 3,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조선·반도체 수출 관여
일본	15%	한국과 유사한 조건으로 25% 위협 관세 인하	자동차·제약·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 포함
EU	15%	EU와 체결한 프레임워크 무역협정에 따라 30% 위협 관세 → 15%로 조정	미국에 600억 달러 투자, 에너지·방산 구매 포함
인도	25%	협상 불발, 초기 위협 수준 유지	러시아 원유 수입에 따른 제재 차원 관세 적용
대만	20%	협상 도중 일시 유예 이후 20% 최종 관세 확정	반도체 제외 상품 대상
스위스	39%	초기 제안보다 확대된 최종 관세율 적용	재협상 가능성 있음
캐나다	35%	협상 무대없이 미국 최고 수준 관세 적용	펜타닐 관련 협력을 이유로 인상
브라질	50%	협상 없이 가장 높은 관세 수준 적용	원자재·곡물 포함 주요 수출품 타격

◆ 이재명 정부 각부장·차관임명 현황

[각부장·차관명단]

-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으며, 부처의 신임 차관 임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처 장·차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8/5기준).

부처	장관	장관주요이력	신임 차관(급)
기획재정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1차관 이형일 2차관 임기근
교육부			최은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LGA연구원장	1차관 구혁재 2차관 류제명 혁신본부장 박인규
외교부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1차관 박윤주 2차관 김진아
통일부	정동영	국회의원	김남중
법무부	정성호	국회의원	이진수
국방부	안규백	국회의원	이두희
행정안전부	윤호중	국회의원	(차관) 김민재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국가보훈부	권오을	전 국회의원	강윤진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놀이니버스 공동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유임)	강형석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	1차관 문신학 2차관 이호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보건복지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1차관 이스란 2차관 이형훈
환경부	김성환	국회의원	금한승
고용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창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회의원	1차관 이상경 2차관 강희업
해양수산부	전재수	국회의원	김성범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전 네이버대표	노용석

II. 주요 입법 동향

1. 법률안 발의 및 제출 현황

◆ 7월 법률안 발의 현황

- 7월 한 달간 새롭게 발의된 법률안은 총 606건입니다. 주간 발의 현황 및 상임위별 법률안 발의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6/30~7/25 기준)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합계
운영위	2	3	5	5	15
법사위	13	19	23	22	77
정무위	4	14	11	10	39
기재위	15	15	13	16	59
교육위	6	10	2	9	27
과방위	7	8	3	6	24
외통위	1	1	2	1	5
국방위	7	4	1	6	18
행안위	30	27	24	29	110
문체위	3	8	6	4	21
농해수위	10	10	15	19	54
산자중기위	7	4	3	7	21
복지위	16	5	3	13	37
환노위	8	8	2	11	29
국토위	10	20	12	13	55
정보위		1			1
여성위	4			4	8
기타		1	1	1	3
미확정		1	2		3
	143	159	128	176	606

2. 주요 쟁점·이슈 법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2025.07.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은 외환시장 및 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통과정에서의 지급결제 실패가 금융시스템의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내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음.

주요국은 이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상환 의무, 이자지급 금지, 정보공시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율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나 체계를 구축한 상황임. 미국(GINIUS Act), 유럽연합(MiCA), 일본(자금결제법), 홍콩(스테이블코인 빌) 등은 이미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감독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

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발행자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보유 및 관리, 공시 및 상환 의무 등 전반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

▶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2025.07.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하여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음.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 대표발의: 김승원의원 (2025.07.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이후 고금리 등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매년 감소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장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함으로써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성장기반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설립요건·운용규제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규율하려는 것임.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형원자로의 상용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대표발의: 허성무의원 (2025.07.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이 전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원자력발전이 전력공급의 중요한 수단이나, 기존의 원자력발전 방식은 대규모 부지와 많은 초기 투자비용, 건설의 장기화, 안전성 우려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최근 차세대 원전기술인 소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가 주목받고 있으며, EU·영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소형원자로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향후 세계 원전시장은 소형원자로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임.

이에 소형원자로의 상용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산권 권리 침해수익금 몰수 및 몰수할 수 없을 경우가액 추징

▶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2025.07.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재산권에 관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은 미약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어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구조이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생긴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III. 국회 주요 일정 및 정책 세미나

1. 세미나(토론회) 주요 내용

[국가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국가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



일시	2025년 07월 16일
장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주최	한민수·최형두 의원실, 한국경영학회
발제자	최재식(KAIST, 교수) 임기남(네이버 클라우드 Social Growth Business, 이사)
토론자	강형구(한양대학교, 교수) 김재원(엘리스그룹, 대표) 장명균(호서대학교, 교수)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요내용)

본 토론회는 글로벌 AI 경쟁 심화에 대응해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한 제도 환경과 민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KAIST 최재식 교수는 세계 주요국은 AI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 조세감면, 직접 보조금 등을 통한 AI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법인세와 투자세액 공제 등에서 미국·일본·유럽에 비해 인센티브 수준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이버 클라우드 임기남 이사는 민간 주도의 AI 기술 개발이 활발하지만, GPU·데이터 등 필수 자원의 확보는 정부 정책적 지원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과 민간 클라우드 연계와 규제 유예제도 및 실증 사업 등 정부 주도의 마중물 정책이 필요함을 발표했고, AI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개방형 데이터와 테스트베드 확충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민간의 기술 개발과 정부의 규제 완화를 연계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한양대 강형구 교수가 플랫폼 기업의 공급망 역할을, 엘리스 김재원 대표는 스타트업 관점의 지원 필요성을, 장명균 교수는 정책·제도 정비를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연계를 주문했다.

본 토론회는 AI 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민간 연대의 출발점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다가온 미래, 에너지 대한민국! 핵융합에너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제]



일시	2025년 07월 07일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주최	황정아의원실·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핵융합혁신연합
발제자	오영국(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홍봉근(전북대학교, 교수)
토론자	부경호(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 조운재(신한대학교 대학원, 원장) 유성택(KAT(주), 대표이사) 소병식(삼성물산, 부사장) 강보선(핵융합정책센터, 센터장) 최준호(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태영(과기부 미래에너지환경과장)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요내용)

이 간담회는 핵융합에너지의 실증 및 상용화 단계에 대비해 국내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협력 및 정책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ITER 부품 조달과정에서의 국내 기술 축적과 K-핵융합산업 협업체 구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고진공·극한기술이 필요한 ITER 참여 경험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술력이 축적되었으며, 향후 국내 실증로 개발 시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전력계통 연계와 에너지 저장 기술의 선행적 고려 필요성이 강조됐다.

토론에서는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한 초기시장 형성, 정부의 중장기 정책 로드맵 제시, 전문 인력 양성, 규제 정비 등이 제안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의 협업 필요성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 토론회는 핵융합에너지의 실질적 산업화를 위한 전략 마련과 민간 협력 기반 조성에 기여한 데 의의가 있다.



관련 구성원



이영희 대표변호사

[프로필보기](#)

T. 02.3479.5756
E. yhlee@barunlaw.com



이용준 고문

[프로필보기](#)

T. 02.3479.7817
E. yongjun.lee@barunlaw.com



이수남 전문위원

[프로필보기](#)

T. 02.3479.6823
E. sunam.lee@barunlaw.com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바른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 바로가기](#)